

정부의 전기산업조직 변천과 소멸



글/산업자원부 과장 이우공

전기산업은 산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의 산업이며 전기산업의 성장수준이 그 나라의 산업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전기산업은 전기가 우리생활에 이용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가 국가적 가치를 중시해 왔으며, 세계 대메이커들은 전기산업을 기초로 번창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오늘날 전기산업은 대부분의 정치가나 행정가들이 전력사업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산업의 가치나 존재가 외면당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정부조직에서 불필요한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가나 행정가들의 잘못된 인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전기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모두가 전기산업을 돌보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미우나 고우나 어느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학계나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이 있겠지만, 정부내에 그 산업의 조직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정부내에 조직이 있어야 전기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며, 다른 연관된 산업과도 연결시켜 공동의 발전을 꾀하고, 금융, 세제, 입지, 인력, 산업기반 등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그 산업의 성장·발전을 도와주게 된다.

또한 국내산업의 육성, 보호차원에서는 할당관세, 조정관세 등 각종 관세제도로서 수입제품에 제한을 가하고, 관세개방과 국내시장 개방 및 정부조달물자 제한입찰 등 산업 내지는 업체보호를 위해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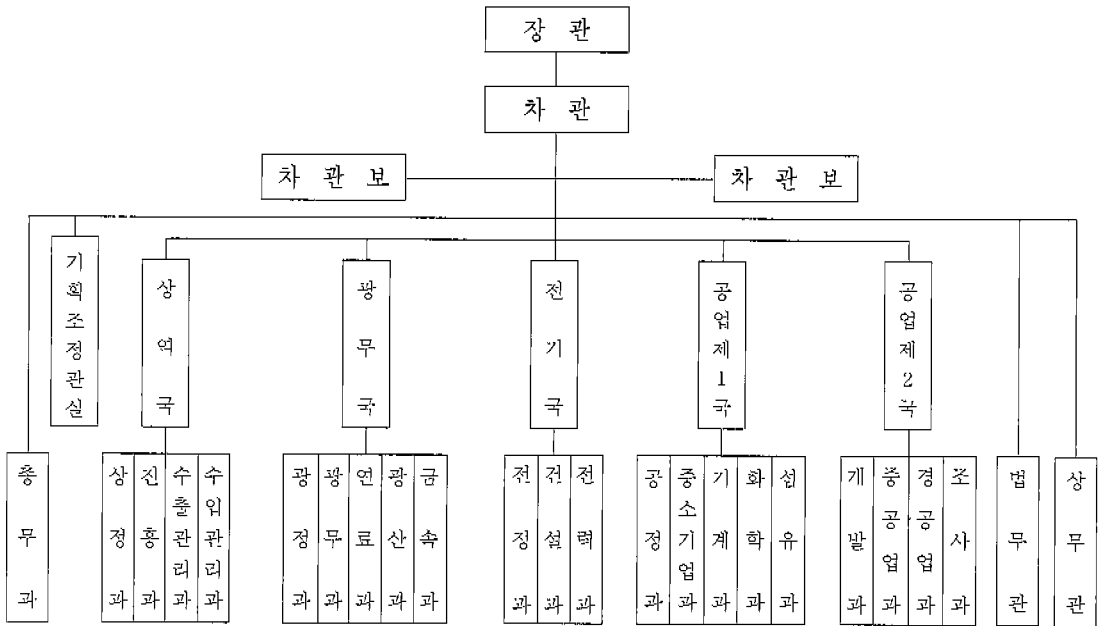
예를들면 신공항건설에 있어서 공항공단이 수변 전소설비, SCADA, 발전기, 배전설비 등 전기설비를 국제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국제입찰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업체들이 외국 유명업체들에 종속되어 기술능력 향상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제품가격도 제대로 받지못하며 막대한 외화까지 유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누가 이러한 일을 막아 주겠는가?

이것을 앞장서서 막아줄 기관은 오직 정부내의 담당조직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내의 전기산업 담당조직은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전기국"으로 출발하였으나 오랜 역사동안 국에서 과로 축소되면서 많은 시련을 거쳐오다가 1998년 3월 3일부로 과이름마저 사라지고 "반도체전기과"란 명칭으로 간신히 반도체에 붙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1948년 11월 4일 정부조직법 시행령 공포당시 1

<표 1> 상공부기구표



실 6국 25과중 전기부분이 1국 4과로 전체조직의 6분의 1을 차지하였다. 당시의 실은 총무, 경리, 감사를 담당하는 곳이었고, 국은 "전기국"을 비롯한 상무국, 무역국, 광무국, 수산국, 공업국 등 6개국이 있었다. 전기국에는 전기에 관한 종합정책을 담당하는 전정과(電政課)와 전력사업과 전력의 생산 및 수출을 담당하는 전력과(電力課), 전력의 공급 및 영업을 담당하는 배전과(配電課) 그리고 전기기기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전기기계과(電氣機械課) 등 4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당시의 행정조직은 그 구성으로 보아 초창기의 전력개발을 위하여 전력사업과 전력수급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3월 31일 개정공포된 정부조직법 시행령은 5국 20개과로 조정되었는데 전기국은 그대로 존속되었으나 과단위의 직제가 크게 바뀌어 전정과(電政課), 건설과(建設課), 전력과(電力課), 기재과(機材課)의 4개과로 구성되었다. 이 조직개편의 주된 내용은 발전소 건설과 송변전 건설에 초점을 두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전기기계과를 공업국의 기계과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전기기기 및 재료로 한정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1953년 11월 25일 정부조직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으나, 이 당시에는 5국 21과로 전기국은 변동이 없었으며, 1955년 2월 17일에는 4국 17과로 축소되는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전기국은 그대로 존속되었고, 1957년 12월 23일에도 정부조직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으나 전기국은 변동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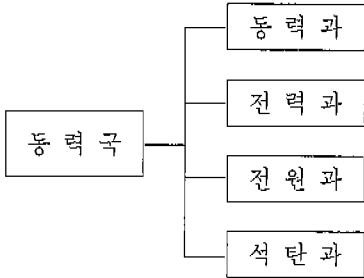
1958년 6월 27일 정부조직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에는 4국 17개과는 변동이 없었으나, 전기국에 기재과(機材課)가 없어지고, 공업국에 화학공업과가 1과, 2과로 분리되어 증가되었는데 이때는 화학공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1960년 7월 1일 정부조직 개편시에는 4국 17개과의 체제 유지속에 화학과가 1개과로 축소되면서 중소기업과가 신설되어 이때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1961년 7월 18일과 1961년 10월 2일의 정부조직 개편시에는 전기국의 조직은 변동이 없었으나 2개과가 증가되었으며, 상무관제도가 신설되어 미국, 홍콩, 대만,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지역에 상무관을 두어 수출업무를 지원하게 하였다.

1962년 6월 29일에 개편된 정부조직은 공업부문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때에 차관보제가 도입

<표 2> 동력국의 기구표



이 되었으며 기획조정관실과 법무관이 신설되면서 4개과가 늘어나 총 6국 23개과로 되었다.

공업국도 공업제1국과 공업제2국으로 대폭 확충되어 경제발전에 따른 공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경공업과가 신설되어 중공업과 경공업이 이때부터 나누어지기 시작하였다.

전기에 관한 업무도 전기국은 순수한 전력사업 및 전력수급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고, 전기기기 및 전기기자재는 공업제2국의 중공업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표 1).

1963년 1월 22일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전기분야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며, 상역국의 보강과 해외 주재관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1963년 9월 3일과 1963년 11월 28일에도 정부조직을 개편하였으나 전기분야에는 변동이 없었다.

1963년 12월 16일 신헌법체제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기구를 개편하게 되었는데 전기국은 그대로 존속하고 공업제2국내에 “전기공업과”가 새롭게 신설되어 이것이 전기공업과의 시초가 되었으며, 공업국의 기능도 대폭 조정되어 이때부터 중공업과 경공업의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공업제1국에는 경공업과, 중소기업과, 유기화학과, 무기화학과, 석유화학과, 섬유과가 있었고,
- ◆ 공업제2국에는 중공업과, 전기공업과, 기계1과, 기계2과, 금속과, 조선과가 있었다.

1964년 9월 14일, 1965년 2월 24일, 1965년 6월

17일, 1966년 7월 11일, 1967년 4월 12일, 1967년 7월 21일, 1967년 11월 23일, 그리고 1968년 5월 7일 등 8차례의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으나, 전기와 관련된 조직은 변동이 없었다.

1968년 7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시에는 조직도 다소 늘어나 1실, 2차관보, 6국, 31과가 되었으며, 전기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각과에 분산되어 있던 에너지자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조정하여 에너지개발과 수급을 일원화하기 위해 전기국을 완전히 개편하여 명칭을 “동력개발국”으로 바꾸고 그 밑에 동력과(動力課), 전력과(電力課), 전원과(電源課) 그리고 석탄과(石炭課)를 두었다(표 2).

동력과에서는 한국전력의 대단위 전력설비를 제외한 모든 동력관련업무와 에너지의 수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전원과는 폐지된 건설과의 업무와 기존 전력설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석탄은 에너지원으로서 발전용과 민수용(난방과 취사용)의 수급을 위해 동력국에 두었다.

이 직제개편에서 전기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를 중소기업국으로 승격하여 이때부터 중소기업국이 오늘날까지 존속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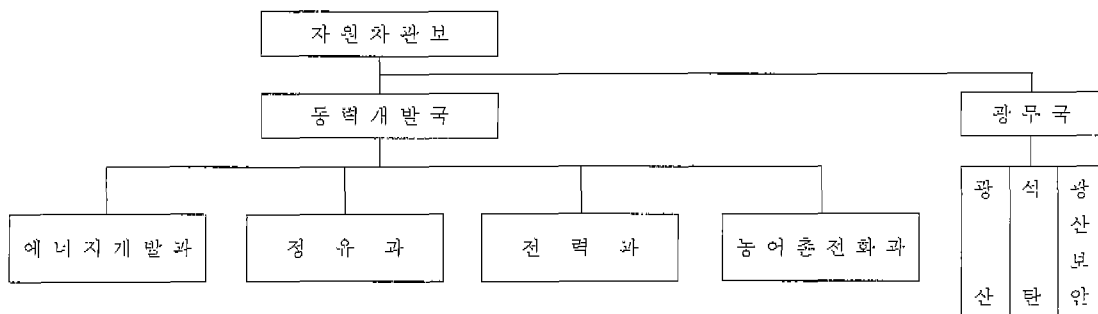
1969년 3월 24일, 4월 25일, 5월 6일, 12월 24일의 4차례에 걸친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전기분야는 변동이 없었다.

1970년 4월 28일 개정된 정부조직개편은 역사상 대변혁적인 개편이 있었는데,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과를 폐지 또는 통합하고 담당관제를 신설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이때의 기구는 1실, 2차관보, 6국, 13담당관, 24과이었고 총인원은 385명이었으며, 1급이 3명, 2급(이사관급)이 10명, 3급(부이사관급)이 3명, 4급(서기관급)이 50명, 5급(사무관급)이 104명, 6급이하가 213명이었다.

동력국도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 석탄과는 광무국으로 이전되고, 동력과가 “동력정책담당관”으로 승격하였으며 공업제2국의 전기공업과는 그대로 존속하였다.

1970년 10월 22일의 조직개편시에는 동력국에 석유업무를 담당하는 정유담당관이 신설되었고 1971년 6월 27일의 조직개편시에는 동력국의 정유담당관이 폐지되고 농어촌의 개발과 삶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에 전기를 공급할 농어촌전화

<표 3> 동력개발국의 기구표



과(電化課)가 신설되었으며, 전자공업의 수출산업과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제2국에 전자공업담당관을 신설하여 이때부터 전기공업과 전자공업이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전기공업보다 전자공업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72년 5월 15일의 조직개편시에는 동력국에 정유담당관이 새로이 신설되었다.

1973년 1월 16일에는 수출100억불 달성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이 당시의 기구는 1실, 5차관보, 11국, 10담당관 46과가 되었으며, 이때에 광공차관보가 “중공업차관보”, “경공업차관보”, “자원차관보”로 개편되었고, 중공업차관보 아래 공업기획국, 중공업국, 기계공업국이, 경공업차관보 아래 화학공업국, 섬유공업국, 중소기업국이 있었으며, “전기공업과”와 전자공업과는 기계공업국에 소속되었고 기계공업국에는 산업기계과, 전기공업과, 전자공업과가 있었고 자원차관보 아래는 동력국의 명칭이 바뀌어 “동력개발국”과 광무국이 있었으며, 조직개편시 과의 조직도 변경되어 동력정책담당관과 전원과가 폐지되고 에너지개발과가 신설되었으며, 정유담당관이 정유과로 격하되었다(표 3).

1973년 3월 28일과 1974년 11월 27일, 1975년 7월 12일 그리고 1976년 3월 13일의 직제개편에서는 전기관련부서는 변동이 없었다.

1976년 4월 6일의 직제개편에서는 동력개발국의 농어촌전화과가 폐지되고 전력과에서 담당하던 원자력발전에 관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발전과를 신설하여 분리·독립시켰다.

1977년 3월 12일과 9월 20일, 10월 19일의 직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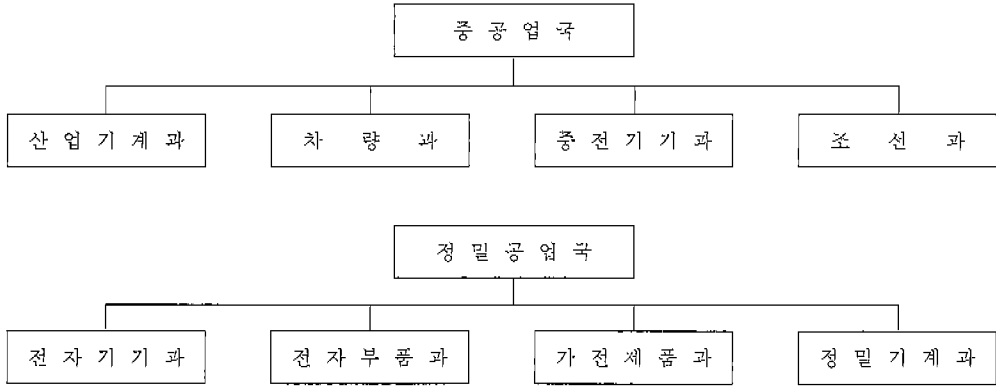
편이 있었으나 전기관련부서는 변동이 없었다.

1977년 12월 16일에는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동력자원부를 신설하여 동력과 광업 및 자원업무를 상공부에서 분리하여 동력자원부로 이관하였는데, 이때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분리되어 15년만에 다시 통합되면서 상공자원부로 태어나게 된다. 이 당시에는 공업차관보 아래 기초공업국, 중공업국, 정밀공업국, 화학공업국, 섬유공업국이 있었으며, “전기공업과”의 명칭이 개정되어 “중전기과”로 되었고 중공업국에 속해 있었고, 정밀공업국이 신설되어 이 국에 전자기기과, 전자부품과, 가전제품과 및 정밀기계과가 속해 있었는데 전자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전자와 관련된 업무가 크게 보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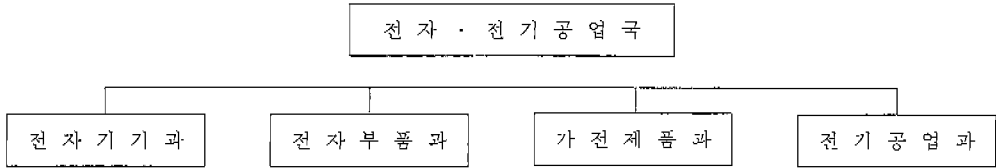
동력자원부의 직제에 대하여는 상공부직제중 전기관련 직제 전반에 대하여 먼저 정리를 하고, 이후에 별도로 정리하겠지만, 상공부의 전력, 석탄, 석유, 가스, 에너지, 자원 등 당시의 골치 아픈 업무들이 동력자원부로 이관되었으며, 동력자원부에는 동력개발국이 전기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신설되고 과명칭도 전력과, 발전과, 원자력발전과, 관리과로 변경되었고, 에너지에 관련된 업무는 기획국으로, 석유에 관련된 업무는 석유국으로 그리고 자원과 관련된 업무는 자원개발국으로 각각 이관되었다(표 4).

1978년 7월 26일 유통근대화 및 수·출입행정의 추진, 기능의 적립을 위하여 조직의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이때에 중공업국과 정밀공업국이 폐지되고 전자·전기공업국과 기계공업국이 신설되었으며, 전자·전기공업국에는 전자3과와 “전기공업

<표 4> 중공업국과 정밀공업국 기구표



<표 5> 전자·전기공업국 기구표



과"를 두어 중전기기과가 다시 "전기공업과"로 태어나게 되었다(표 5).

1979년 5월4일, 1980년 2월 1일, 1981년 2월6일, 1981년 11월 2일, 1982년 9월 27일의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전자·전기공업국은 변동이 없었다.

1983년 5월 21일에는 산업정책의 기능보강 및 정보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였는데, 전자·전기공업국도 개편되어 전자기기과가 전자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정보기기과가 신설되어, 전자정보산업이 이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84년 8월 30일, 1985년 7월 25일, 1986년 12월 27일, 1987년 1월 19일, 5월 23일, 6월 17일, 12월 31일, 1990년 4월 9일, 1991년 2월 1일의 9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전자·전기공업국은 변동이 없었다.

1991년 11월 22일의 조직개편시에는 상공부의 마지막 조직개편으로 1실 2차관보 9국 4담당관 54과가 있었고 마산, 이리관리소와 무역위원회가 있어 기능직 164명을 포함하여 총 736명이었다.

이 당시의 조직개편시에는 전자·전기부문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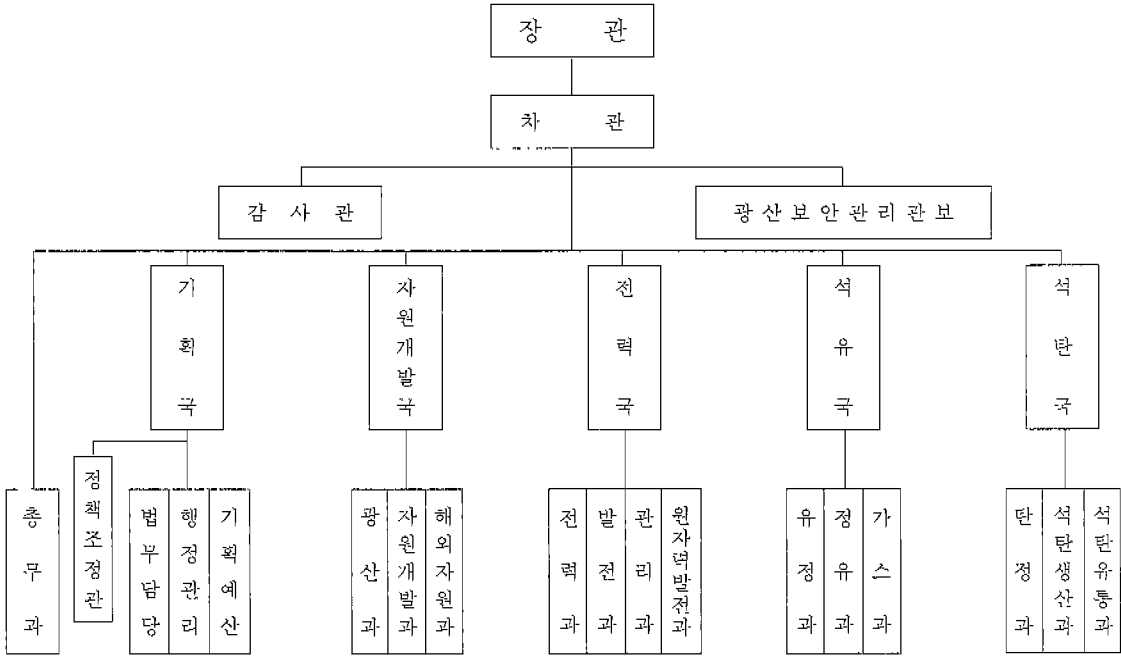
는 전자부품과와 가전제품과가 폐지되고 전자기기과와 반도체산업과가 신설되어 반도체산업이 이때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전기산업은 전자산업에 이어 정보산업과 반도체산업에 밀리게 되었고, 더욱이 정보산업은 체신부(현 정보통신부)와의 업무영역 싸움으로 전력적으로 만든 조직이었으며, 반도체산업은 민간기업의 반도체 수출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동력 자원부의 직제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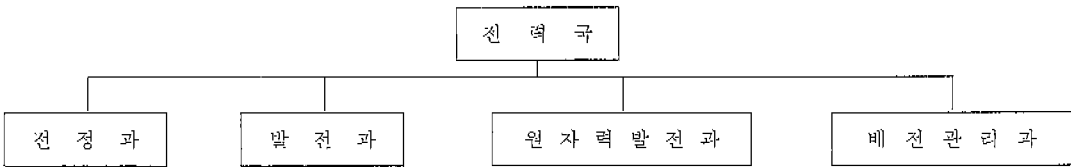
1977년 12월 16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동력 자원부가 탄생하였으며 발족당시에는 1실 5국(기획국, 자원개발국, 전기국, 석유국, 석탄국), 5담당관(정책조정, 공보, 감사, 광산보안, 비상계획), 20과 275명으로 출범하였으며, 전기국은 전력과, 발전과, 관리과와 원자력발전과의 4개과로 구성되었다(표 6).

1980년 4월 7일과 1981년 4월 2일 조직개편이 있

<표 6> 동력자원부기구표



<표 7> 전력국 기구표



였으나 자원정책실이 신설되고 전기국은 변동이 없었다.

1981년 11월 2일 조직개편에서는 전기국의 명칭을 전력국으로 개칭하고 전력과를 전정과로, 관리과를 배전관리과로 명칭을 각각 개칭하였다(표 7).

1983년 4월 23일의 조직개편시에는 전기관련조직은 변동이 없었으며, 1984년 11월 30일 개정된 조직에서는 전정과를 전력정책과로, 발전과를 수화력발전과로, 배전관리과를 전력운영과로 각각 개칭하는 외에 별다른 변경은 없었다.

1986년 12월 27일과 1988년 5월 6일, 1989년 6월 17일의 3차례 조직개편시에는 전기관련기구는 변동이 없었다.

1991년 9월 25일 개정된 조직에서는 전력국에

원전입지과가 신설되어 전력정책과, 수화력발전과 및 원자력발전과의 발전소와 송·변전시설의 건설부지 확보업무를 이관받아 담당하였다.

1992년 8월 31일의 직제개편에서는 전력국에 원자력연료과가 신설되어 원자력발전과의 핵연료 취급업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를 이관받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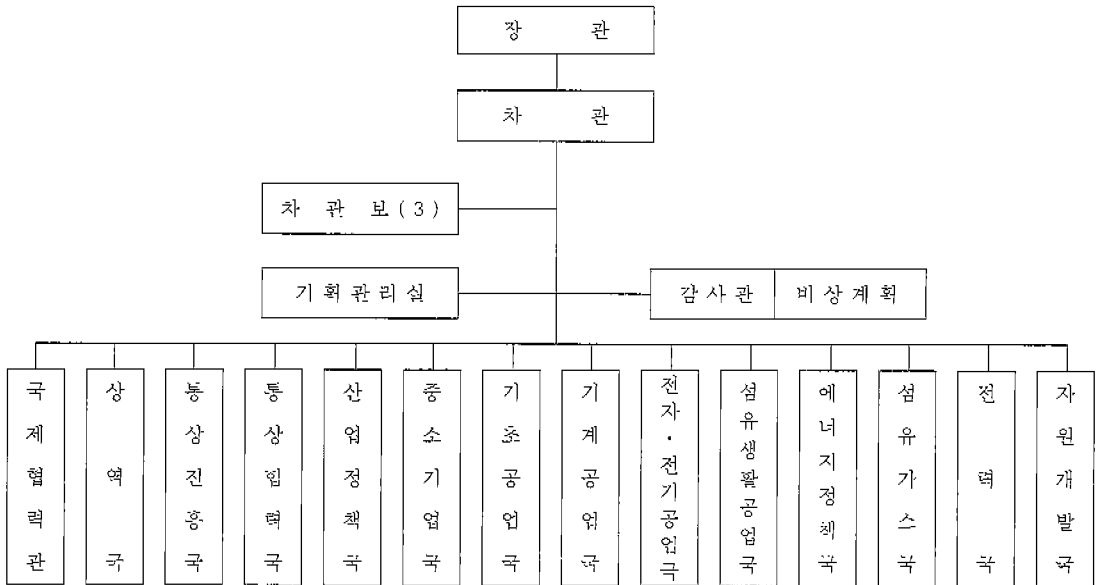
상공자원부의 탄생

1993년 2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의 기치를 내걸고 정부조직개편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 다른 부처는 큰 개편이 없었으나 상



<표 8> 상공자원부 기구표



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하는 엄청난 조직변경을 가져왔다.

통합당시 상공부는 실급 3개, 국급 13개, 과급 54개와 마산·이리관리소, 무역위원회(1실, 1국, 4과)를 합쳐 736명의 인원이 있었고, 동력자원부는 실급 2개, 국급 8개, 과급 30개와 등록소, 광산보안사무소 5개를 합쳐 455명(기능직 95명 포함)이 있었다.

이 당시의 조직개편 내용은 실급을 2개 줄여 3개로 하고, 국급은 4개 줄여 17개로, 과급은 4개 줄여 80개로 하였으며, 기타기관은 변동이 없었다.

이 당시 인력은 64명이 감축된 1,123명이었다. 조직개편후의 전기산업 관련기구는 전자·전기공업국은 변동이 없어 전기공업과가 그대로 있었고, 전력국도 변동이 없어 전기분야는 과거 상공부나 동력자원부의 기구가 존속되었다.

1993년 8월 9일과 1994년 1월 17일의 조직개편시에는 전기관련국(局)과 과(課)는 변동이 없었다.

1994년 3월 14일 개정된 조직은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한다는 명목아래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전자·전기공업국의 명칭이 전자정보공업국으로 변경되어 전기국의 이름이 사라졌고, 과는 정

보기기과가 정보진흥과로, 반도체산업과가 부품반도체과로, 전자기기과가 생활전자과로 변경되었으나 전기공업과는 그대로 존속하였다(표 8).

전력분야는 석탄업무와 합쳐서 전력석탄국으로 신설되면서 원자력연료과가 원자력발전과로 합쳐지고, 전원입지과가 전원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전력석탄국은 전력정책과, 전력수급과, 전원개발과, 원자력발전과, 석탄산업과, 석탄수급과, 광산지도과의 7개과로 구성되었다.

통상산업부의 탄생

1994년 12월 13일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고 정책의 개방화 자율화 및 규제기능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조직개편을 하였는데 직제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국단위의 조직은 대부분 심의관제도로 바뀌고 국은 산업정책국, 중소기업국, 기초공업국, 생활공업국의 4개국만 남게되었다. 이때에 전자나 전기는 국이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과단위로 축소되었다.

이때부터 통상산업부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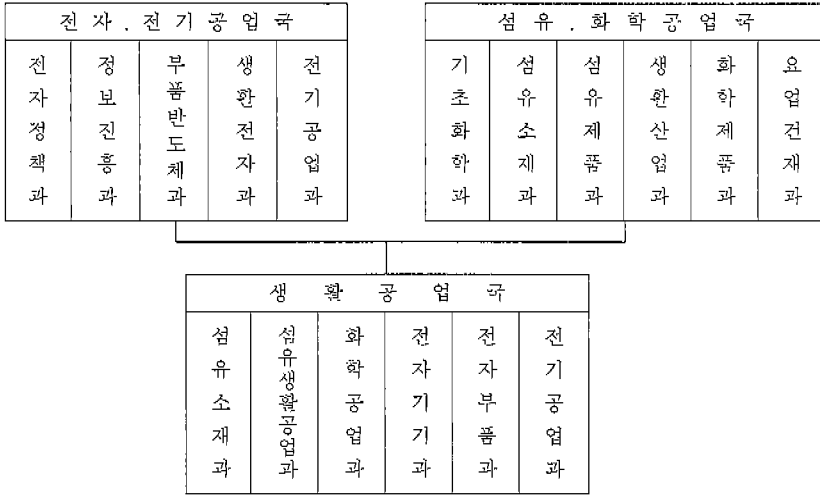
<표 9> 변경된 기구표 비교

차관보	실	국	담당관 (2~3급)	과	담당관 (4급)
3	1	12	4	67	9



차관보	실	국	담당관 (2~3급)	과	담당관 (4급)
1	3	4	9	41	18

<표 10> 축소된 생활공업국 기구 비교



부처가 심의관계도를 도입하였는데, 사실상 심의관계도는 종전의 극단위 제도와의 전혀 차이가 나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성만 가져왔다.

당시 기구표의 변화는 본부의 3차관보, 1실, 12국, 4담당관, 76과가 1차관보, 3실, 4국, 9담당관, 59과로 변경되었고 등록소, 보안소, 관리소, 무역위원회는 변화가 없었으며 정원은 1,074명에서 964명으로 110명이 감소하였다(표 9).

전자정보국과 섬유화학공업국이 통합되어 생활공업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전기·전자분야의 기구도 축소되어 전자정책과와 정보진흥과, 생활전자과 및 부품반도체과가 폐지되고 전기공업과만 남았으며, 새로이 전자기기와 전자부품과가 신설되어 폐지된 4개과의 업무를 분담하였고, 생활전자과의 전기제품과 시계에 관한 업무와 전자정책과의 측정기기와 의료기기에 관한 업무는 전기공업과로 이관되었다(표 10).

전력석탄국은 자원정책심의관으로 변화되고, 수화력발전과와 석탄수급과가 폐지되었으며, 전기분

야는 전력정책과, 전원개발과, 원자력발전과의 3개과가 존재하였다.

1995년 4월 12일 일부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별다른 변동은 없었으며, 1995년 10월 19일 조직개편에서도 별다른 변동은 없었으나 자원정책 심의관이 제1-제4심의관으로 분리되어 전력분야는 제4심의관이 담당하게 되었고, 전기분야의 전원개발과가 수화력발전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산업자원부의 탄생

1998년 3월 3일 신정부의 작은정부 만들기에 따라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는데 통상산업부의 명칭이 산업자원부로 변경되고, 통상교섭업무와 중소기업업무가 각각 외교통상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다.

그 외의 조직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전기분야에 있어서는 전기공업과가 폐지되었다는 것이

<표 11> 산업자원부의 전기관련 기구표

생활산업국			
섬유생활산업과	화학생활산업과	생활전자산업과	반도체전기과

전력심의회		
전력정책과	수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과

매우 중요한 일이다.

조직개편의 내용은 생활공업국의 명칭이 생활상업국으로 바뀌고 전자기기와 전자부품과 및 전기공업과를 폐지하고, 생활전자과와 반도체전기과가 신설되었는데, 전기공업과의 업무중 중전기와 전선 및 계측기기는 반도체전기과로 이관되고 조명기기, 가전기기, 의료기기 및 시계는 생활전자과로 각각 이관되었다(표 11).

전력심의관실은 조직의 변화가 없었으나 이곳은 전기제품의 생산, 판매, 수출보다는 한국전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생산업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또 사실상 생산업체와 관련된 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 반도체전기과에서 중전기기를 담당하고 있으나 사무관 1인, 주사1인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폭넓은 전기공업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전기공업과의 소멸은 1948년 전기기계과의 탄생으로 보면 약 50년, 1963년 전기공업과의 탄생으로 보면 35년을 끝으로 정부내의 전기공업전담과가 사라진 셈이다.

전기공업과의 소멸은 앞으로 전기공업의 성장·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업계가 업계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도 정부내에 전기공업과의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전기관련 단체가 과거의 전기공업과의 임무를 이어받아 대관업무, 국제업무, 기술개발, 내수시장 보호, 업체지원, 인력양성, 해외진출, 수출지원,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전파, 기술기준, 표준화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 주어야 할 것이며, 업체들은 단체를 육성하여 단체를 중심으로 한테 뭉쳐 힘을 길러서 어려운 시기에 대처해 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게된 동기는 정부내의 전기업무 전담 조직은 업계의 권리와 이익을 찾기 위해서 미우나 고우나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조직이다.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당시 학계, 업계, 단체 등에게 전기공업과의 존재를 살리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심혈을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전기인의 단합이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또 전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정부내의 전기업무 담당과가 어디인지 또 그 조직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사업상 정부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어느 부서와 상의를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업계에 전달하여 앞으로의 국내외적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함이다.

미니상식

Crowding out

(크라우드아웃)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해 만개번에 돈을 쓸어가는 바람에 민간으로 흘러갈 투자자금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기업들은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금리도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

근본적으로는 투자자금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